

박근혜 '19년 정치인생' 수의 입고 끝나나

탄핵 3주 만에 구속 위기...영장 실질심사 받는 첫 대통령 오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지 3주일 만에 구속위기에 몰리게 됐다.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첫 여성·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그런 영광은 뒤로하고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이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때문이다.

선진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후 집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대중 앞에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로 입성했으며 19대 때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를 지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됐다.

유력 대 주자로 발돋움한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패배했다. 이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연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2009~2010년 세중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완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중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리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파문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풍문으로 나돌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겹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

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어 특별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신체의 자유'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

| | |
|-------|--|
| 3월10일 | 한반도연구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인용, 박 전 대통령 파면 |
| 3월12일 |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복귀 |
| 3월15일 | 검찰 특수부, 박 전 대통령 3월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출석·소환 조사 통보(피의자 신분 조사) |
| 3월21일 |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22일 오전까지 조사 마치고 귀가 |
| 3월2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 3월30일 |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김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3월31일 | 새벽계 구속여부 결정 전망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27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서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구속 여부 강부영 판사 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판사 손에 달렸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연합뉴스

檢, 영장 청구 조기 결단은 대선 영향 최소화 의도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결정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지 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범주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사실상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셈이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이날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수감될 경우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 가까이 추가·보장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망이다. 다만, 법원 재판은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속전속결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자 노

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학살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20여일간 신병 처리를 미지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을 산 전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영장 청구에는 물증·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부인으로 일관한 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공범들과의 형평성과 함께, 구속 수사 여론이 60~70%에 육박해 검찰로서 구속 영장 청구를 배제하거나 시점을 늦출 명분 또는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제44회 光日 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보훈대상이 올해로 44돌을 맞이합니다. 光日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자립에 성공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자의 배우자로서 중상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 **접수** : 2017년 4월 7일(금)까지
- **발표** : 2017년 6월 6일(화) 광주일보
- **시상** : 5명(상금 각 100만원·부상)
- 일시 : 6월 13일(화) 오후 3시
- 장소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 (062-975-6642)

주최 : 光日日報 후원 : 광주지방보훈청

박근혜 혐의 13개...추가 가능성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3개 혐의 외에 죄명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제기된 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이다.

특검은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달리 평가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과 최씨 측에 지급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특검 이 외 4개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의 지시·관여(㉢),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1급 문화체육관광

광부 공무원 3명 사직 압박(㉣),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의 중과 다른 보고서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사직 압박(㉤),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 나온행 분부장 승진 청탁(㉦) 등이다.

제1기 특수부 수사 결과에서는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 송금 후 반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씨가 세운 더블루게이가 매니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 실제 장단은 안철,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KG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지시 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1급 문화체육관광

뇌물 혐의 등 모두 유죄 땀 최장 징역 45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유죄 인정될 경우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장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기준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임전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신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정성동 삼성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